



이재명 대통령 "의무기간 끝난 등록임대주택, 세제도 같아야 공평"



전문가 "증여보다 양도가 유리하지만, 추후 상속 증여도 고려해야" 주택 사진

이재명 대통령은 9일 등록임대주택에 주어지는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의 존속 여부에 대해 논의해보자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엣 트위터)에 "일정 기간 처분 기회는 줘야겠지만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엣 트위터)에 "일정 기간 처분 기회는 줘야겠지만

양도세 중과 제외' 화두로..."아파트만·점차 폐지 등 방안 있어"

"다주택 자유지만 파생된 사회문제는 책임져야...수십만호 공급 효과"

임대 기간 종료 후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각종 세제도 일반 임대주택과 동일해야 공평하지 않겠느냐"고 적었다.

등록임대주택이란 임대료의 연 증가율을 제한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추면 임대사업자에게 각종 세제 혜택을 줬던 제도다.

문재인 정부가 2017년 전셋값 급등과 임대차시장 불안 등에 대응하기 위해 활성화했으나 혜택이 과도해 투기 및 세금회피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2020년 비(非)아파트에 대한 장기 매입임대를 제외하고 폐지됐고, 이후 윤석열 정부에서 6년간의 비아파트 단기 매입임대가 일부 부활했다.

이 대통령의 설명에 따르면 서울 시내에 남아있는 등록임대주택은 약 30만호(아파트는 5만호)로, 이들은 취득세·재산세·종부세를 감면받고 다주택 양도세 중과도 제외된다.

의무 임대 기간이 지나면 재산세·종부세 감면 혜택은 사라지지만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은 계속 받게 된다.

이를 두고 이 대통령은 "같은 다주택

인데 한때 등록임대였다는 이유로 영구적으로 특혜를 줄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도 있다"며 "의무 임대에 대한 보상은 임대 기간의 세제 감면과 임대 종료 후 일정 기간의 양도세 중과 제외로 충분하지 않느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외 특혜는 즉시 폐기 시 부담이 너무 크므로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없애거나 점차 폐지하는 방안도 있다.

대상을 아파트로만 한정하자는 의견도 있다"고 했다.

구체적인 유예 방안으로 1년간의 말미를 준 뒤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하거나, 1~2년은 혜택의 절반 폐지하고 이후 전부 폐지하는 형태 등도 언급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집을 여러 채 가지든, 금값의 초고가 주택에 살든 기본적으로 자유지만 그로 인해 파생된 사

회 문제에 대해 일정 부분 책임은 지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무 임대 기간과 일정한 양도세 중과 제외 기간이 지난 등록임대 다주택이 일반 다주택처럼 시장에 나오면 수십만호 공급 효과가 있다"고도 내다봤다.

"이제 대체투자 수단이 없는 것도 아니니 생각을 바꿀 때도 됐다. 국민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시나"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전날에도 "임대용 주택을 건축했다면 몰라도,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집을 얼마든지 사 모을 수 있다는 것도 이상하다"며 "건설임대 아닌 매입임대를 계속 허용하지는 대한 의견을 묻는다"고 화두를 던진 바 있다.

민간 주택임대사업을 둘러싼 세제 등 보다 세부적인 논점을 제시하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와 공급 활성화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활성화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채봉 기자

몸낮춘 정청래, 거듭 "대통령께 죄송" 이언주 "제2 체포동의안 가결 가결"

정청래, '특검 추천 사고' 연이틀 사과...비당권파 "덮을 일 아냐" 성토

추천 당사자 '친청' 이성윤 "유감...음모론적 의혹 제기 안타까워"

'지선前 반대' 의견 속출...당청 이상기류 와중 '강행'엔 부담 관측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9일 2차 종합특검 후보에 대한 인사 검증 실패와 관련해 "다시 한번 대통령께 누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대단히 죄송하다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의 최종 책임은 당 대표인 저에게 있다.

당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 공(功)은 당원들에게 돌리고 과(過)는 제가 안고 간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박수현 수석대변인을 통해 "당의 인사 검증 실패로 대통령에게 누를 끼쳐 드려 죄송하다는 입장"이라고 간접적으로 사과와 의사를 전했는데, 이 날 공개 석상에서 직접 재차 사과한 것이다.

정 대표는 특검 후보 검증을 담당한 원내 지도부에 화살을 돌리기도 했다.

"특검 추천 사고를 보면서 그동안의 관례와 관행을 고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좋은 사람이 있으면 원내 지도부에 추천하고, 원내 지도부가 그 사람

을 낙점하고 추천하는 방식이었는데 여기에는 빈틈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다"고 했다.

민주당은 종합특검 후보로 검찰 '특수통' 출신인 전준철 변호사를 추천했는데, 그는 2023년 이른바 '대북송금 의혹 사건' 관련 재판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변호를 맡았던 인물이다.

이에 이 대통령은 상당한 불쾌감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당에서도 정청래 지도부를 향한 비판이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여당이 아닌 조국혁신당이 추천한 인사를 특검으로 임명했다.

정 대표의 거듭된 사과에도 당내 반발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 대통령의 질타가 알려진 이후 첫 최고위원회의가 열린 이날 비당권파 최고위원들은 전 변호사를 추천한 친청(친정청래)에 이성윤 최고위원을 겨냥한 비판을 쏟아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전 변호사를 특검 후보로 추천했다는 것은 단순 실수로만 치부할 수 없는 빼아픈 실책"이라며 "우리 당과 대통령에게 심각한 정치적 부담을 주는 행위였으며, 제2의 체포동의안

가결 시도와 다름없다는 게 당원과 지지자들의 시각"이라고 직격했다.

이는 2023년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

방을 불법 대북 송금 의혹으로 이 대통

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당시, 당내 이탈표로 인해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던 일을 상기한 것이다.

"김성태 변호인단' 출신을 특검 후보로 추천한 행위 자체를 체포동의안 가결 시도에 비견할 만큼 심각한 정치적 반란"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황명선 최고위원도 "검찰의 '이재명 죽이기'에 앞장섰던 김성태 변호인을 추천한 것은 분명한 사고"라며 "이 문제는 변명으로 덮을 일이 아니다.

일 아닌데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식의 물타기 또한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전 변호사를 추천했던 이 최고 위원은 "추천 과정에서 좀 더 세밀하게

살피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특검 천거 과정에서 정치적 해석과 음모론적 의혹이 제기되는 게 안타깝다"고 반박하는 모습도 보였다.

"저는 누구보다 윤석열·김건희 내란과 국정농단에 대해 티끌까지도 청산하는 수사를 원했던 사람"이라며 "전 변호사는(검사 시절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 한동훈 채널A 사건을 저와 함께 담당해 윤석열 정권에서 압수수색을 당하는 등 텡살았던 변호사"라고 했다.

"쌍방울 사건에 이름을 올린 것은 김성태 본인이나 대북송금 조작 사건과는 무관하며, 그마저도 변론 중간에 중단했다"며 "대북송금 조작 의혹 사건의 변호인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심귀영 기자

수업을 혁신하고 학습을 확장하는 AI 활용 교육

디지털 격차 해소를 단계별로 실현하겠습니다!

전라남도교육청